

인천일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민관 협의체 꾸린다

조만간명단 확정-이달첫 회의키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에 난항을 겪는 경기도가 돌파구를 마련한다. 고양·김포·파주시 등 지역별로 다른 이해관계를 해결할 민관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기 때문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고양·파주·김포시와 유네스코·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도는 조만간 협의체 구성원 명단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첫 회의(Kick-off)를 열 계획이다.

도가 지정을 추진하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은 파주 비무장지대(DMZ)와 한강하구다. 이 지역은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다.

이에 도는 고양시 구산·법곳·대화·장항·신평동과 파주시 적성·진동·진서·군내·장단·파평·탄현면과 문산읍, 김포시 월곶·하성·양촌면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 3월19일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3개 자치단체가 모두 난색을 보였다.

지금까지 군사보호시설·문화재 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시달린 지역주민들이 이를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양시 관계자는 “도 취지엔 공감한

다. 하지만 행주 어촌계 주민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뒤 불이익이 생길 거라고 본다”며 “이런 인식을 먼저 바꾼 뒤 추진해야 좋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김포·파주시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이러면서 도가 고민에 빠졌다. <인천일보 4월6일자 1면 경기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고심>

이런 가운데 도는 현안 해결의 구심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때까지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민관 협의체는 앞으로 시·군별 유네스코 동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한다. 또 지역주민 인식 개선 교육과 생물권 보전 지역 지

정과 연계한 지역사회 발전 정책을 제안한다. 타당성 조사와 용도 구역 설정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과 연계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천군은 지역주민의 반대를 이겨내고 지난해 6월 국내에선 7번째로 유네스코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에 성공하는 등 모범 사례로 꼽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뒤에도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는 점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중심으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hss@incheonilbo.com